

社說

노태우 사망, 고령의 전두환도 사죄 안할텐가

끝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직접 사죄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가장으로 치러진다고 한다. 매우 유감이다. 서거라는 표현 역시 부적절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숨졌다. 아들 재현씨가 광주를 여러 차례 방문해 뜻을 전하기는 했지만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사왔다. 사후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보여주기식 소라고 5월단체는 규정하고 있다. 5·18을 왜곡한 회고록을 수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제출 등 진상규명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까지 묵살했다.

노태우는 1979년 12월12일 육사 동기인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하나회' 세력의 핵심으로서 군사쿠데타를 주도했다. 5공화국 말기 정권 후계자로 부상해 야권 후보분열에 따른 반사 이익을 보면서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퇴임 후에는 1995년 쿠데타와 5·18 무력 진압, 수천억원 비자금 등으로 나란히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박탈됐다. 파란만장한 영욕의 삶을 살았다.

노태우는 5·18 진상규명의 핵심인 발표 책임자를 밝히는 중요 인물로, 1988년 5·18을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규정하면서

도 계엄군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군인, 경찰이 충돌해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것이라며 본질을 호도했다. 2011년 회고록에서도 유언비어에 현혹된 것이 원인이었다는 주장을 폈다. 마땅히 고백할 부분이 많은데, 안타깝다. 한 인간의 죽음을 애도하기에 앞서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이 큰 것이다. 국가장 예우와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을 이유다.

전두환과 2인자 노태우는 정권 찬탈자이자 학살의 책임자다. 내란죄를 선고받은 중대 범죄자다. 역사의 죄인이다. 이들이 죽더라도 5·18의 진실이 사라질 수 없다. 고령의 전두환이 늦기 전에 참회하고, 광주에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죄업을 씻는 최소한의 길이다. 5월 단체의 성명대로 진심어린 사죄와 증언으로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살아 있는 자들의 도리다. 5·18민주화운동사위원회도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아직 단죄가 끝나지 않았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계획 현 정부에서 확정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다음 정부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낸 것인데, 영호남·충청 시민사회단체가 임기내 이전계획 확정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공공기관추가이전 공주전남시도민운동본부, 지방분권전국회의 등은 청와대 앞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올 가을 대통령의 결단이 있을 것이라는 김 총리의 발언이 뉴스를 타고 흘러나온지라 지난 10월14일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긍정적 발언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지방의 기대와는 다르게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대로 지방소멸의 경고 소리가 요란한 상황에서 외면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대부분은 파국을 맞게 된다는 절박한 호소다.

사실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이미 총축되고도 남음이 있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10곳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112개에 불과한 실정이며, 전문가

추산에 따르면 추가이전 대상은 122개에서 210개에 이르고 공공기관이 투자하고 출자한 회사도 279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지역 간 갈등에 대한 우려로, 선거에 미칠 영향으로, 기관 노조의 반대 등의 이유로 계속 머뭇거리다면 균형발전 정책은 결국에 지리멸렬, 공명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 총리는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축사를 통해 "차기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균형발전이라는 전략 자체를 외면할 수 없는 중요 국가시책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그래서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길을 열어줘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기본계획 또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수도권 비대화가 심각한 현실이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이외에 지역혁명의 묘수를 찾지 못한다. 비수도권도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요구해야 한다. 지방의 사활이 걸린 중대사안이 아닌가.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결단, 지자체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때다.

위드 코로나 시대, 함평 국화향기에 흠뻑 취해보세요

자치단체장 칼럼



이 상 익 함평군수

찌는 듯한 무더위는 가고, 어느새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가을이 다가왔다. 제법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올 가을은 그 어느 때 보다 무척이나 반갑게 느껴진다. 정부가 다음달 중 '위드 코로나' 선언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잠시 끊겼던 함평 축제의 맥을 새로 잇는 중요한 전기이기도 해서다.

정부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다. 이미 전 국민 70%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자랑하고 있다. 여기에 안정적으로 방역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 코로나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 탄력을 받아 함평군은 올 가을 '대한민국 국화대

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논의 시작도 전에 반대 의견도 많았다.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축제 강행은 무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군 직원들은 물론, 외부의 축제관광 전문가들까지 머리를 맞대고 수차례 회의를 거쳤고 자문도 수없이 받았다.

결론은 개최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10월 개막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위드 코로나 선언 시기와 맞물리도록 행사 일정도 한 차례 연기했다.

오는 11월 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함평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화대전에서는 다채로운 명품국화 조형물 전시를 만날 수 있다. 먼저 지구불 손 모형, 바다거북과 물고기, 꿈나무 희망나뭇잎, 바나나, 아기상어 등 조형물부터 600여 점의 야간경관 조형물도 설치돼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국화의 향연이 펼쳐진다.

국화의 매력을 작품으로 살펴보는 본재작품전시관, 대한민국국화동호회 작품관도 별도로 마련되며, 관람객을 빛의 세계로 안내할 미디어아트(미디어파사드) 전시도 마련된다. '지구와 인간의 공존'(중앙광장), '겨울의 땅 북극'(읍 시가

지), '미디어 찾자리'(군충생태학교) 등을 즐길 수 있다.

다육식물관, 자연생태관, 곤충생태학교, 버드존, 함평천지길 허수아비 전시도 곳곳에서 열리며,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특별기념전으로 함평국립미술관에서 이이남 미디어아티스트의 개인전, 버스킹 공연도 마련된다.

이처럼 축제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코로나에 지친 군민과 관광객들을 위로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서였다.

그동안 수많은 대형 행사와 축제가 취소되면서 사람들은 어느새 갈 곳을 잃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과 시간이 제한되는 등 모든 움직임에 제한을 받았다.

어제 보면 축제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위기 상황이다. 관광업 무, 뽕로로, 아기상어 등 조형물부터 600여 점의 야간경관 조형물도 설치돼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국화의 향연이 펼쳐진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23년 이상 축제를 개최해 온 노후를 가진 함평군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놓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야외 행사장이다 보니 관람객 수를 제한하고 거리두기를 잘 지킨다면, 위드 코로나 시대의 축제관광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겠다고 확

기고



강 은 순 광주시 출산보육과장

아이들의 빈틈없는 돌봄을 위하여

"벼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농부의 정성과 부지런함 그리고 애달음이 느껴지는 말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있는지 살펴보고 마음 쓰고 사소한 부분까지 걱정하는 농부의 노고에 벼는 누렇게 익어간다.

아이들을 키우는데는 더 많은 시간과 정성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돌봄 그리고 공공의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우리시는 아이들의 안전과 돌봄이 광주시 정책의 중심이자 출발이라 여겨 공공 돌봄을 위해 여러 가지 해법을 찾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최초로 다자녀와 맞벌이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외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손자녀돌봄비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특·광역시 최초로 병원에 입원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연간 150시

간씩 입원아동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24시간 긴급아동돌봄센터를 운영하고, 6-12세 초등 아동돌봄시설인 다함께 돌봄센터 마을에서 공동육아 초등학교 돌봄을 지원하는 여성가족친화마을 확대를 추진중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내에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영유아 실내놀이 체험 시설인 키움뜰도 현재 운영중이다.

올 상반기 이들 정책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24시간 긴급아동돌봄센터'는 상반기 이용실적이 288건 1천960시간으로 이미 지난해 동안 180건 1천401시간을 초과했으며,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도 올 상반기 이용실적이 1천940건 6천727시간으로 이미 지난해 동안의 1천841건 6천298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공공 돌봄의 영역 확대를 위해 민간기관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등 2019-2022년 4개년 계획을 세워 단계별로 확충을 추진중이다.

국공립어린이집 32개소에서 20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53개소

로 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공동시설 개선비와 기자재 비용 등 시비로 추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분산되어 있는 돌봄 기관의 서비스와 실시간 정보제공을 한 번에 검색하고 알 수 있도록 광주아이킴 플랫폼(www.광주아이킴.kr) 구축하여 돌봄시설, 돌봄서비스, 돌봄정책 예약 서비스와 상담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일하는 부모의 돌봄 환경을 개선하고자 2019년부터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 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임산부 근로자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시 건강보험료, 퇴직적립금 등의 사업자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영아기 돌봄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특·광역시 최초로 올해부터 광주출생육아수당을 추진해 지급 대상자가 크게 늘고 있다. 3개월 이상 광주시에 거주한 세대의 출생아 1명당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생후 24개월 까지 매월 2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출생축하금 5천555명, 육아수당 12만 5천569명 등 총 13만 1천124명에게 306억원이 지급됐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의 시행 결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광주시의 7월 출생아 수는 71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3%가 증가했다. 올 1-7월까지 누계로는 총 4천853명이 태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 4천372명에 비해 11% 증가했다. 특히 상반기 7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광주시가 유일하다.

광주시는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직은 잔존해 있는 돌봄 공백을 민·관이 협력하여 촘촘하게 메워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이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모여 이러한 정책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을 때 우리시가 지향하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따뜻한 광주'가 더욱 꽃을 피울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의 발걸음은 오늘도 아이들의 행복을 향하고 있다.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광주에 한 발자국 가까이, 더 가까이!

독자투고

* 독자투고를 기드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불안·공포심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 112로

스토킹 처벌법이 10월21일 본격적으로 시행돼 벌써 한 주를 맞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행 첫날인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가 451건으로 집계되는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이나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을 주거나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흉기 등을 소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스토킹은 그 자체로부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고 더 나아가 살인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큰 행위이며, 우리 가족이나 주변인 누구나 이러한 스토킹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경찰도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을 주거나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

허위신고, 누군가의 골든타임이 지나간다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바로 112, 119 등 각종 긴급신고이다. 그러나 이런 긴급신고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경찰은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추세다. 112 허위신고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누군가에게 허위 신고의 행위가 한 순간의 유희거리일지는 몰라도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는 정말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인 경우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건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로, 과료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역시 이런 허위신고의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 '19년도와 대비하여 '20년도의 경우 처벌비율이 1.8%정도 증가되었다. '장난전화 한 번 한 것 가지고 너무 가혹한거 아닌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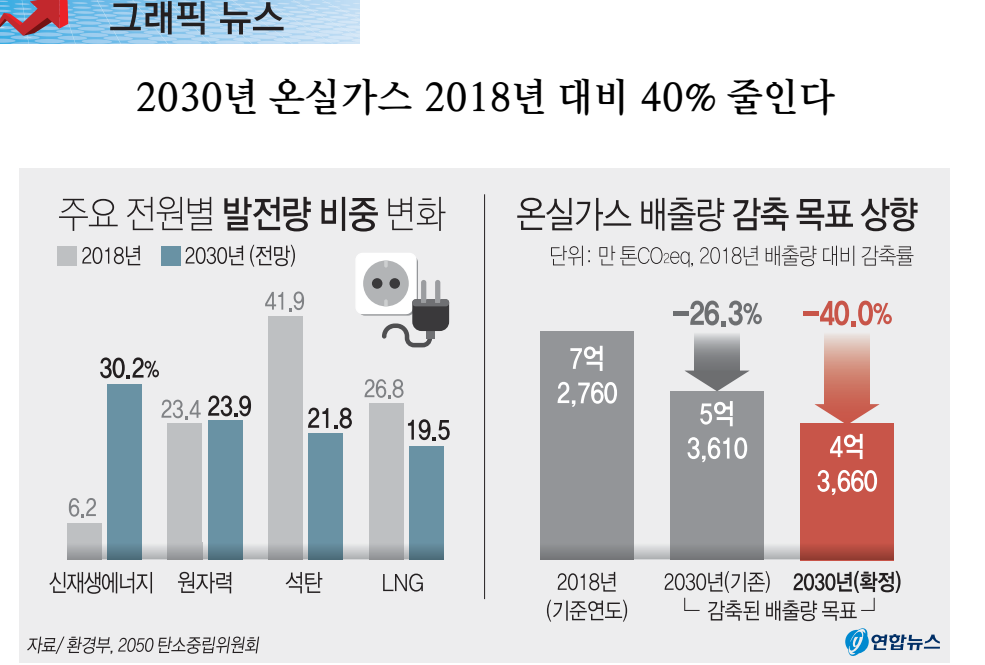
아무 생각없이 하는 허위신고가 점차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내 가족이나 이웃이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를 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소희·보성경찰서 경무계)

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건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로, 과료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역시 이런 허위신고의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 '19년도와 대비하여 '20년도의 경우 처벌비율이 1.8%정도 증가되었다. '장난전화 한 번 한 것 가지고 너무 가혹한거 아닌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무 생각없이 하는 허위신고가 점차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내 가족이나 이웃이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를 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소희·보성경찰서 경무계)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황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인 2030 NDC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존 2030 NDC는 2018년 대비 26.3% 감축하는 것이 목표였다. 전환(발전) 부문은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 대비 절반 정도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배출량을 44.4% 감축한다. 석탄발전 비중은 2018년 41.9%에서 2030년 21.8%로 줄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8년 6.2%에서 2030년 30.2%로 끌어올린다.

산업 부문은 철강산업 공정의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14.5% 감축하고, 건물 부문은 에너지절감 건축 활성화, 에너지 효율을 기기 보급 등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2.8% 줄인다.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를 450만대 이상 보급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7.8% 감축한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9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기부 650-2030	사건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기획사입국 650-2079	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가)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